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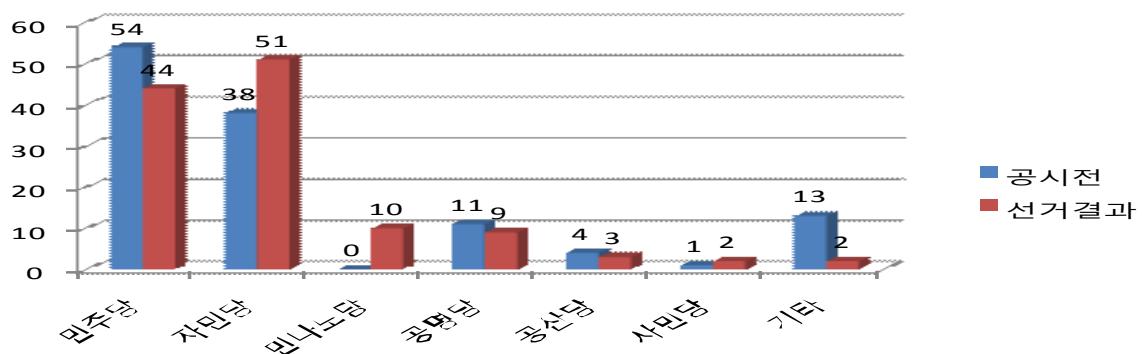
일본 참의원선거 결과와 영향

2010.7.12 한일재단

I.참의원선거 결과

- 제22회 참의원선거(7월 11일) 결과 121의석(선거구 73, 비례 대표 48)의 당선자가 확정
 - 민주당은 과거 54의석에 크게 미달한 44의석(선거구 28, 비례 16)을 확보하여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하였음
 - 간 나오토 총리는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출발선에 선 마음으로 정권을 이끌어 가겠다”고 총리직을 유지할 뜻을 밝혔으나 여당내에서 총리와 집행부에 대한 비판이 있어 정권운영이 어려울 전망
- 과거 38의석 이었던 자민당은 51의석(선거구 39, 비례 12)을 확보하여 신임을 회복
 - 특히, 민나노당은 10의석을 확보하여 약진. 공명당은 9의석. 공산당은 3의석, 사회민주당도 2의석. “일어서라 일본”과 “신당개혁”은 각각 1의석을 확보. 국민신당은 3의석 모두 상실

《선거결과 (각 정당의 의석수)》



〈정당별 참의원 의원 의석〉

정당별	이전	전체의석	당선의석	증감
민주당	116	106	44	△10
자유민주당	71	84	51	13
공명당	21	19	9	△2
민나노당(다함께당)	1	11	10	10
공산당	7	6	3	△1
국민신당	6	3	0	△3
신당개혁	6	2	1	△4
사민당	5	4	2	△1
일어나라 일본	3	3	1	-
기타(무소속 포함)	6	4	0	△2
합 계	242	242	121	△2

○ 참의원 선거의 특징: 노조, 관료 출신이 증가

- 참의원선거 당선자를 출신 분야별로 보면 지방의원이 출신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19.8%) 그 다음으로 노동조합 임원과 관료로 각각 14명(11.6%)
- *지방의원 출신은 2007년보다 5.8포인트 줄었고 노조 임원은 3.3포인트 증가, 관료는 1.7포인트 증가
- *민주당 당선자 44명 가운데 노조 임원 출신은 14명(31.8%)으로 과거에 비해 15.8%로 늘어나 노조 의존도가 심해짐
- *자민당 당선자 51명 중 지방의원 출신이 15명(29.4%)를 차지
- *당선자 모두 공무원제도개혁을 내걸어 약진했지만 당선자 10명중 3명(30.0%)는 관료 출신

○ 평균 연령은 1.5세 증가

- 당선자 평균 연령은 52.8세로 가장 젊었던 2007년 51.3세 보다 1.5세 늘어남
- *최고령은 카타야마 토라노스케씨(일어나라 일본) 74세
- *최연소는 나카니시 유스케씨(자민당) 31세
- *세대별로 30대 11명, 40대 40명, 50대 33명, 60대 29명, 70대 8명

- 총무성이 발표한 투표율은 57.92%로 2007년 참의원선거에 비해 0.72% 하회
 - 도도부현별 최고 투표율은 시마네현 71.7%, 돗토리현 65.8, 최저는 오키나와현 52.4%
 - *07년 참의원선거 투표율은 58.64%
- 이번 선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지바 법무부 장관이 간 내각 장관 가운데 유일하게 낙선했음
 - 간 총리는 지바 법무부 장관을 계속 유임시킬 계획이라고 언급
 - 호리우치 야구 감독(요미우리자이언트) 등 운동선수나 연예인들도 많이 출마했으나 낙선했음
 - *유도선수 출신(시드니아테네 금메달리스트) 다니 료유코는 민주당 비례대표 득표 2위로 당선
 - 나오히마 경산대신은 비례대표로 당선(3선)
 - 한국계 2세 의원인 백진훈씨도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
 - 대만계 텔런트 출신 민주당 간판스타인 렌호 행정쇄신담당장관이 최다득표로 당선(도쿄)

II. 민주당 참패 요인

- (간 나오히마 기자회견)“소비세 인상문제를 언급한 것이 국민들에게 당돌한 느낌으로 전달된 것 같다”고 소비세 인상문제에 대해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한 것이 패인이라고 언급
- (민주당 패배 요인)민주당의 매니페스토에는 향후 일본비전이나 구조개혁, 그리고 이념 등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최대의 패인
 - 매니페스토를 통해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자민당과의 정책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요구가 높았으나 설명이 부족

- 하토야마 정권 때 부총리를 역임했던 간 총리에 의한 지금까지의 매니페스토와 이번 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의 차이. 또 미래의 일본 모습에 대한 비전과 정책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크게 작용하였음
- 특히 소비세 문제에 관해서는 총리의 위기인식과 국민들의 생각과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소비세 인상이 필요한 이유와 재정적인 문제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였다는 지적
- 간 총리는 선거전 후반에 소비세 인상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지만 소비세에 관한 발언이 흔들리는 등 국민들에게 불신감을 안겨 주었음

《간 총리의 소비세 발언 내용》

6.26: 민주당의 공약은 “소비세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 공약”

6.30: 소비세를 환원하는 연봉상한을 200만엔라고 언급, 이후 300만엔, 400만엔 등 언급할 때마다 금액 차이가 생겼음

- 경제·재정정책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효성에 부족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졌음
 - 경제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일본의 모습을 숫자로 제시하는 것이지만 민주당의 매니페스토에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구체적인 실효계획이 보이지 않았음
 - 경단련 요네쿠라 회장도 계획 수립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행해야 하는 이유와 실효성에 관한 제시라고 언급
 - 재정문제는 사회보장제도에서 매년 적자가 어느 정도 증가하고, 국채를 얼마나 발행해야 하는지를 예상을 하거나, 예산재배분이나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를 숫자로 제시하여 국민들이 이해를 얻었어야 하는데 설명이 부족하였음

- 각 정당이 제시한 매니페스토가 유사하여 국민들은 어느 당을 지지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음
- 소비세 인상도 각 정당도 똑같이 주장하고 있는 정책인데다가 매니페스토만으로 정책의 차이를 찾아내기 힘들었음
- 또 매니페스토가 지금 일본의 경제상황과 대중의 기대가 반영된 것인지가 불명확하였음

《민주당과 자민당의 매니페스토》

	성 장	재정재건	사회보장	기 타
민주당	명목 3% 실질 2% 성장	-기초재정적자를 2015년 까지 50%삭감 -소비세 10% 방침	자녀수당은 1.3만엔에 서 2.6만엔으로 증가	-국가공무원 인 건비 20%삭감 -고속도로 무료 화 추진
자민당	명목 4% 성장	-재정건전화책임법 제안 -소비세 10% 방침	어린이 의료 무상화, 보육요금, 유치원 무 상화	-향후 10년간 고 용 자 소 득 을 50%증가시킴

- 하토야마 정권 때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불신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정권교체, 참의원선거를 실시해 버렸음
- 「정치와 자금」 문제를 안고 있는 오자와 전간사장과 거리를 두는 정책은 지지를 받았으나 민주당에 기대하고 있었던 ①국민에 대한 사죄 ②자금과 정치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설명이 없었음
- 하토야마와 총리와 정권을 교체하여 한때는 지지율도 상승한 간 내각이었지만 간 총리도 하토야마 정권 당시 부총리직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과 반성을 표명해야 했음
- (자민당이 약진한 배경)자민당과 민나노당(모두의 당) 의석이 증가한 것은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구체성 결여와 설명부족에 의한 것이 큼

- 국민의 기대에 대한 배신, 설명부족, 실효성에 대한 불신감 등 3가지 요인이 자민당 약진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음
- 자민당도 07년 참의원선거에서 6승 23패로 대패하였던 선거구를 집중적으로 공략한 전략도 이번 승리에 영향을 주었음

III. 참의원선거의 행방

○ 선거결과, 민주당이 참패하여 향후 정치판도의 변화가 예상

-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연립관계를 구축하지 않았던 정당과 연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
- 의석이 54석을 하회하고 국민신당도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참의원 국회운영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계재편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 소비세 증세와 재정문제가 향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민주당의 선택은 소비세 인상을 반대하는 정당과 연합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민나노당과의 연계 가능성이 있음

- 민나노당과 연계가 성공했다고 해도 과반의석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정당과 연계가 불가피. 그러나 평소 비판을 해 온 공명당과의 연계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 향후 정국은 정체될 가능성이 큼

○ 민주당의 최대파벌인 오자와 그룹이 집행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큼

- 오자와 前간사장계열의 의원그룹은 내각개편과 당집행부의 선거책임 인사 단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시사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9월 민주당 대표 선출시 정계복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

- 오자와 그룹은 이번 선거의 집행부인 에다노 간사장, 아즈미 선거대책위원장의 책임을 묻고, 오자와 계보의 인재 등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앞으로 민주당내에서 오자와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2011년 예정된 통일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식상해할 가능성도 있음
- 민주당 정권과 연립파트너인 국민신당은 이번의 선거에서 의석확보에 실패하여 정당으로서 존재감을 완전히 상실
- 따라서 국민신당이 강력하게 추구해 왔던 우정개혁법안의 추진도 어려워지고, 연립 의미도 없어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IV. 선거 결과가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

- (미츠이스미토모은행) 중의원은 여당이 과반 의석, 참의원은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비대칭형 국회로 여당이 주도적으로 국정운영을 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
- 소비세율 인상과 재정건전화 논의로 선거기간 중에 금리는 떨어졌지만 선거 결과, 채권 매도 재료가 금리상승으로 연결될 리스크도 상존
- 이런 불투명한 요소 때문에 일본경제에는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 영향이 예상됨. 단, 이번 선거결과의 영향으로 총선거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고 명확한 성장비전을 제시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메이지 야스다 스미토모생명)간 총리의 사임 시나리오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님. 그러나 민주당내에서 책임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피할 수 없고 향후 정국운영에 대한 불투명성이 높아졌음
- 재정건전화는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국제공약으로 궤도수정은 생각하기 어려움. 긴축재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은행에 대한 금융완화압력이 계속 가해질 가능성이 높음

- (제일생명 경제연구소)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 실패로 정책수행이 어려워질 전망
-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실시한 자녀수당이나 고속도로 무료화 등은 물론, 에코 카 감세, 에코 포인트 등이 종료되는 10월 이후,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 가속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임
- 향후 중요한 포인트는 9월 민주당 대표 선거. 이번 선거 기간중 오자와씨가 대표선거를 앞두고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발언과 행동이 많아질 것으로 보임. 당대표 선거후에는 정권재편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년 예산 통과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V. 선거 결과가 한일 관계에 끼칠 영향

- (한일 FTA) 한일 FTA는 장기과제로 검토되고 있는 만큼 이번 선거 결과로 별다른 영향을 주질 않을 것으로 전망
- (외국인 참정권) 외국인 참정권 부여는 민주당의 당초 의지와는 달리 법안 제출을 미룬채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상황에서 이를 다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
- (징용피해자 보상) 징용피해자의 전후 보상도 참의원 선거 전에 일본인 시베리아 억류자에게 보상을 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서 한국 등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기대가 커짐. 센고쿠 관방장관도 최근 "정치적으로 개선 가능한 방침을 만들어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안건도 있다"며 한국, 중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 보상 가능성을 언급. 그러나 이런 법안들도 여당 단독으로는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이상